

# 민주 지도부 '병립형' 띄우기... 공약 파기 논란에 고심

###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시 위성정당 출현 막을 수단 없어 "총선 승리 위해 불가피"...의총서 논의·여야간 협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병립형으로 회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류 측 주장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라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주류 측은 이런 '병립형 회귀 필승론'을 서서히 띄우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키게'라고 불어봤다"고 했다.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하며 복귀했던 일화를 환기하면서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차약'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선 공약 파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대

표가 개인을 위해 약속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절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내 의견이 워낙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홍 원내대표는 두세 차례 의원총회를 더 열어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야 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야 간에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저출생 해결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 민주 최고위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여줬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 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도 말한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달 임시국회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앞 유가족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장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기에 언제든 처리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 특별법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8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처리에 대해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확실하게 그날 통과한다는 말을 못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특별법 처리 자체를 안도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8일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이달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이 특별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 조사 관련 권한을 제외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를 계속해보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등을 활용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유가족 유형우씨는 "지난 400여일이 어제같이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1년같이 느껴진다"며 "제발 하루빨리 유가족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홍 원내대표에게 호소했다.

/연합뉴스

## 'DJ 3남' 김홍걸, 서울 강서갑 출마 선언

### 현역 강선우에 도전장... "윤석열 정권 심판·강서구 숙원 해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6일 서울 강서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강서갑 현역의원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다.

비례대표 초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강서갑에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강서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강서구정당 보궐선거에서 봤다. 강서구민의 가슴엔 김대중 정신과 오만한 권력을 거부하는 용기, 불의를 거부하는 양심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제2의 전두환 신군부로 검

사들을 사조처럼 거느리며 공포정치를 펴다"며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이 정권에 가장 절망적인 패배를 안겨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강서구 고도제한은 이제 정치·행정 아닌 외교 문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에 관한 기준을 바꿔줘야 한다. (나에게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만든 해외 네트워크가 있다"며 지역 숙원 사업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연고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서울은 하나의 선거구"라며 "권유를 많이 받았고 보궐선거 지원을 다니며 느낀 바가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